博士學位의 質 관리

이제는 社會的 公信力이 필요하다

李 敦 熙
(서울大 敎育學科)

작년 한해 동안에 우리나라의 고등교육 기관으로부터 博士學位를 취득한 사람은 전체적으로 3천 명에 약간 못미치는 정도였다. 이러한 숫자는 우리나라 고등교육 인구에 비추어 볼 때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라고 할 수도 있으나, 1970년대까지만 해도 박사학위 소지자가 매우 귀했던 것에 비하면 가히 놀랄 만한 量的 成長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는 수준이다. 여기에다 해외에서 취득한 사람들까지 합하면, 그 수는 엄청난 것이어서 이제 '아무개 博士'라는 칭호는 더이상 稀貴와 權威와 名譽를 상징하는 것으로서는 별로 의미가 없게 되어 버렸다.

작년에 박사학위를 수여한 국내의 대학 기관은 모두 43개이다. 이중에서 30명 이상에게 박사학위를 수여한 대학이 23개이며, 그중 4개의 대학은 100명 이상에게 박사학위를 수여하였다. 學位의 種類만도 18종에 이르고 있다. 한해 동안에 수여된 학위 중에서 그 수가 비교적 많은 것을 들어 보면 공학박사는 약 600명, 의학박사는 약 500명, 문학박사는 각기 약 420명, 이학박사는 약 400명에 주어졌다. 작년에 약 2,800명이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는데, 이는 16년 전인 1974년의 碩士學位 취득자 수보다 많으며, 40년 전인 1950년의 學士學位 취득자 수를 능가한다.

옛날 같으면 박사학위 소지자는 대학의 교수집단에서도 그렇게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지 않았으나, 지금은 사회의 여러 부문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정도가 되었다. 이렇게 박사학위 소지자가 大量 生産되고 있다는 것은 종래의 학위 소지자에게 주어지던 권위와 명예의 빛을 잃게 만들기 때문에 다소 불안을 느끼는 사람들도 있는 것같다. 대개 희귀성으로 인하여 사회적 위세를 누려왔던 초기의 박사학위 소지자들, 학문을 특별히 숭상하면서 학자적 권위는 수준높게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리고 대량생산은 곧 學位의 濫發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그러하다. 그러나 박사학위의 양산이 반드시 質的 低下를 의미하고 그 희귀성이 바로 學者的 權威를 성립시켜 주는 조건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질적으로 잘 관리되는 상태에서 박사학위가 주어지고 있다면, 그 수가 많은 경우에 희귀성이 가져다 주는 권위와 명예에 다소 손상을 준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우리 사회의 성장을 나타내는 하나의 지표이기도 하다. 희귀성으로 인한 권위는 엄격한 의미에서 學問的 本質과는 무관한 것이다. 물론 우리 사회의 學歷競爭的 분위기와 '學歷 인플레 현상'이라고까지 말하는 高學歷指向은 사회의 전체

적인 人力構造에 여러 가지의 문제를 야기시킬 수도 있다. 그러나 이것은 일시적인 현상일 수도 있으므로 장기적인 안목에서는 크게 우려할 일이 아닐 것같다.

여러 학문 영역과 전문 분야에 엷은 高級人力層을 형성해 온 우리의 실정에서 볼 때, 박사학위 소지자의 증가는 일면 우리 사회의 발전적 현상이기도 하다. 사회의 여러 전문 부서에 박사학위 소지자가 증가한다는 것은 人力의 良質化를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거기에다 고도의 전문성을 요청하는 새로운 분야들이 생기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 사회가 요청하는 박사학위의 量的 水準을 종래의 전통적인 學位觀에 따라 판단할 일은 결코 아니다. 더욱이 우리나라의 인구학적 구조를 볼 때, 전반적으로 國民의 學歷水準이 급격히 높아가고 지식층도 그만큼 두터워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의 학위 소지자 수가 상대적으로나 절대적으로나 결코 많다고만 할 것은 아니다.

그러나 문제는 대량생산의 과정에서 어느 정도로 학위의 質을 잘 관리하고 있느냐이다. '學問의 殿堂'이라고 일컬어지는 대학이 수여하는 징표는 그 권위에 상응하는 산물이어야 하고, 그것이 생산되는 제도적 과정과 절차는 어떤 방식으로든지 公信力을 보장하는 것이어야 한다. 학위가 갖는 權威란 반드시 그 자체로서 지니는 임의적 기준의 위세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公信力을 내포하며 어떤 의미의 客觀性을 암시하는 것이다. 그러한 공신력은 학위수여에 따르는 社會的 責務性을 의미하며 또한 學問共同體에 대한 신뢰를 가능하게 하는 근거이기도 하다. 물론 학위의 質은 물질적 商品의 질을 관리하는 것과 같이 가시적 지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객관적 기준을 설정하는 데 대단한 어려움이 있다. 사실상 이러한 특징 때문에 남발의 우려가 있고 또한 불필요할 정도로 지나친 신중론도 있다. 아무리 남발하더라도 합리화할 수 있는 여지가 있고, 아무리 신중을 기한다고 하더라도 그 질을 완벽히 보장하기는 어렵다.

학위수여의 공신력과 객관성을 만족시키기 위한 대안으로서 두 가지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하나는 학위 생산과정에 관계하는 학문공동체로서의 대학 구성원들이 지닌 良識과 責務意識에 호소하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制度的 管理體制를 강화하는 것이다. 분명히 학문공동체의 존엄을 위해서나 자율성의 신장을 위해서나 전자가 후자보다는 적어도 도덕적으로 바람직하고 원리상으로도 이상적인 것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그러한 당위성은 현실적·기술적으로 아무런 문제나 우려없이 수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닐 뿐더러 반드시 최선의 것이라고 하기에도 어려운 점이 없지 않다.

우리 사회에서 박사학위는 아직은 여러 가지로 그 위세를 지니고 있다. 그것은 대학교수라는 專門職을 얻기 위한 資格證처럼 되어 있고, 학위를 소지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은 다른 직종에서도 임용·승진·보수 등에 있어서 차등적인 대우를 받게 되어 있다. 학위의 소지는 또한 개인적으로는 권위와 명예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것은 학위를 소지한 당사자의 실질적 자질보다는 그것이 제도적으로 상징하는 바의 위세에 의한 것이다. 이와 같이 實質的 能力主義가 아니라 形式的 能力主義가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한 박사학위는 어느 기관에서 주어지는 것이든 간에 동등한 공신력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그렇지가 않다. 학위과정에 입학할 대상을 선발하는 기준이 대학마다 다르고, 그 과정을 운영하는 기본적인 과정과 질적 수준이 대학에 따라서 상당한 차이가 있으며, 학위논문과 훈련과정에 있어서도 질적인 차이가 있다면, 학위의 소지자에게 주어지는 형식적 능력주의의 반영은 그 자체로서 公正性을 잃고 있는 것이다. 機關別로 수여되는 학위의 질적 격차는 어떠한 객관적인 측정으로 조사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묵시적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 엄연한 사실이다. 그러한 격차는 大學間뿐만이 아니라 같은 대학에서의 學問分野間에도 있고, 같은 전공분야에서 학위 지도와 심사에 참여하는 敎授陣間에도 있다.

물론 학위의 질적 차이는 박

사의 경우만이 아니라 석사 또는 학사학위의 경우에도 거의 마찬가지로 있는 현상이며, 그것이 완전히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기도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사학위에만 엄격한 질적 관리를 요구하는 것은 박사학위에 대한 인습적 편견, 즉 우리가 흔히 '博士'라고 칭할 때 지니게 되는 권위주의적 기대에 지나치게 매여 있는 탓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질적 관리의 문제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같은 논리로서 다른 하위 학위에도 적용되는 것이므로 박사학위에 대한 어떠한 편견의 작용이라고만 할 수는 없다.

1차적으로 교육복지의 균등한 배분을 그 이념으로 하는 普通敎育과는 달리, 학위를 수여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高等敎育은 전문적 인력을 양성하고 충원하는 社會投資로서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그러므로 그 체제에는 기회의 균등과 같은 사회적 원칙만이 아니라 효율성을 겨냥하는 經濟的 원칙이 또한 적용되지 않을 수 없다. 학위 소지자들이 지닌 전문성은 다소 客觀的 기준에 의하여 인정되어야 하고, 사회적 차원에서 보아 能率的으로 충원되어야 한다. 말하자면 학위를 소지할 자질을 가진 사람이 소지하여야 하고, 그 자질은 학위의 수여자에 의해서 상당한 정도로 공신력을 지녀야 하며, 사회가 필요로 하는 만큼 생산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학위를 수여하는 대학은 그만큼의 긴장을 요청받게 된다. 그러나 그러한 긴장만으로 학위의 질적 수준이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학위과정을 운영하는 관계자들의 학문적·도덕적 긴장의 정도가 대학 간에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호소하여 부여되는 機關別 自律性이 사회적 공신력을 만족시키는 충분한 조건은 되지 못한다. 말하자면 대학이 도덕적으로 완벽하다고 해서 공신력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학위의 질을 관리하기 위해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는 것이 반드시 그러한 긴장의 정도에 대한 不信을 의미하는 것만도 아니다. 어떤 물리적인 구속을 가하는 제도는 자율성을 제한하기 위한 것일 수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합리적 행위의 과정을 관습화함으로써 일관성 있는 기준을 정착시키는 힘이 되기도 한다.

그러한 기준의 사회적 정착은 個別機關의 良識이나 緊張에 의해서 가능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광범한 학문공동체의 참여를 통한 상호 조정과 공동 노력을 필요로 한다. 개별 기관의 양식과 긴장은 아무런 합의된 내용을 담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특히 우리의 대학사회처럼 그 전통이 얕고 학위과정 운영의 경험이 일천하며, 거기에다 대학 간의 협동적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지 않고 적지 않게 機關別 利己主義까지 잔존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서로가 서로를 규제하면서 학위의 공신력에 대한 책무의식을 공유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지금은 超機關的 機構가 필요한 상황이다.

그러나 나는 박사학위의 질을 공동으로 관리한다는 명목으로 제도적 기준과 장치가 대학마다의 자율성을 극단적으로 제한하는 劃一主義에 빠지거나 대학사회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官僚主義的 힘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임의적으로 어떤 超越的 權威, 특히 정부의 일방적 결정에 의해서 설정될 때 경직된 획일주의와 고질적 관료주의가 그 운영의 원리로서 등장한 예는 지금까지 얼마든지 있어 왔다. 우리는 이런 현상의 재현을 경계하지 않으면 안 된다. 획일성은 규격화된 기능인을 낳을 뿐이며, 경직된 관료주의는 모든 창의적 노력을 풀죽게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러한 제도적 기준과 장치의 설정은 대학사회가 사회적 공신력을 증진시키고 학문공동체의 책무의식을 수행하려는 노력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自律性의 槪念도 개체적 방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책무의식을 공유하는 정신으로 실현되어야 한다. 그리고 우리의 대학사회가 학위의 질을 관리하는 데 적절한 傳統을 구축하고 합리적 慣行을 정착시키게 되면, 공동관리의 체제가 단순히 형식적 기능밖에는 더이상의 의미를 지닐 수 없는 경지에 이르게 될 수도 있다. 이러한 수준에 이르렀을 때에는 제도적 번거로움을 유지시킬 필요가 없으므로 공동관리의 체제는 지체없이 폐기될 수도 있

어야 한다.

共同管理의 구체적인 방식으로 우리는 이런 제도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즉, 현행과 같이 기관별 자율성을 존중하면서 학위를 수여하게 하고 이를 '機關別 學位'(혹은 다른 이름)라고 명하며, 기관별로 수여된 대학 학위의 질적 수준을 再公認하는 기구를 두어 公認學位로서의 명칭을 부여하는 방식이 있을 수 있다. 이 제도는 현재 프랑스의 대학이 '大學博士'와 '國家博士'의 제도를 양립시키는 것과 같은 것이다. 그러나 그 公認機構는 정부의 권위로써 설립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대학간 협의체의 중재에 의해서 대학들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형식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 기구는 국내 대학에서 수여된 학위뿐만 아니라 외국에서 취득한 학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또한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되 과거의 것에까지 소급해서 적용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다.

박사학위를 공인하는 데 기술적 어려움이 없지는 않다. 현행 제도에서는 學位論文의 질적 수준만을 평가해서 박사학위를 수여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소정의 敎育課程을 이수하여야 하고 학위논문을 제출하기 위한 資格試驗을 치러야 하며 口述考査에도 합격을 해야 한다. 이러한 전반적 과정을 전체적으로 다시 심사하여 재공인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그러므로 공인제도는 학위논문에 한정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도 박사학위의 질을 관리하는 데 중요한 기여를 할 수 있다. 물론 거기에도 審査基準의 客觀性이 문제될 수도 있다. 그러나 객관적 평가의 가능성을 전적으로 부인한다면 우리는 學位制度를 원천적으로 무의미한 것이라고 말해야 한다.

外國의 大學, 특히 서구와 미국의 대학에서 취득한 학위에 대하여 國內 大學에서 취득한 학위보다 더 높은 권위를 부여하고자 하는 편견이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다. 그것은 물론 서구와 미국의 대학이 우리의 대학보다 훨씬 깊은 전통을 가지고 있고 학문적으로 선진적 위치에 있어 왔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러나 박사과정에 입학하는 데 요구되는 교육 연한, 학위과정을 이수하는 방식, 학위의 종류와 명칭, 학위논문의 실질적 기준 등에 있어서는 나라마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말로 '博士'라고 번역될 수 있는 학위라고 해서 모두가 우리의 박사학위와 대등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그리고 大學과 學位의 질적 격차는 우리의 대학에만 있는 것이 아니므로 공동관리 체제에 의한 再公認은 외국의 박사학위에도 적용하는 것이 당연하다.

대학사회가 박사학위의 共同管理를 제도화한다는 것이 학문공동체의 위세를 되찾고 사회적 공신력을 높이며 학위의 권위와 명예를 회복시킨다는 점에서만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오히려 학문공동체의 質的 退化現象을 방지하고 대학간의 협력체제를 구축하는 하나의 방식이기도 하며, 방임된 상태의 혼란이 가져 온 무력감으로부터 대학사회가 자율적인 힘으로 秀越性의 價値를 복원할 수 있는 길이기도 하다. 學問的 秀越性을 잃은 대학은 생명력을 잃은 것이며, 그 자체의 존속을 위해서나 사회적 힘을 생산하는 기구로서의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나 아무런 의미를 지닐 수 없는 것이 된다. 이러한 학문의 수월성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각종의 학위이며 박사학위는 그것의 절정을 의미한다. 박사학위의 실질적 權威는 그 자체로서 대학의 권위이고, 그것의 質的 水準은 그 자체로서 학문공동체의 수준을 반영하며, 그것이 지니는 名譽는 그 자체로서 대학의 명예를 대표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것은 결코 어느 상황에서도 방치하거나 체념하거나 오도된 현실과 타협하면서 다루어야 할 것이 아니다. ☛